

2014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4.7.26 시행)

01.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답] ② 거버넌스는 공공관리과는 달리 정치적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

☞ 2014 선행정학 p. 142

02.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추출정책 | - 부실기업 구조조정 |
| ㄴ. 상징정책 | - 노령연금제도 |
| ㄷ. 규제정책 | - 최저임금제도 |
| ㄹ. 구성정책 | - 정부조직 개편 |
| ㅁ. 분배정책 | - 신공항 건설 |
| ㅂ. 재분배정책 |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

- ① ㄱ, ㄴ, ㄱ
- ② ㄱ, ㄷ, ㅂ
- ③ ㄴ, ㄷ, ㅂ
- ④ ㄷ, ㄹ, ㅁ

[답] ④ ㄷ, ㄹ, ㅁ만 옳다.

- ☒ ㄱ. 규제정책(강제퇴출)
 ㄴ. 재분배정책
 ㅂ. 분배정책

☞ 2014 선행정학 p. 156

03.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③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 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입할 수 있다.

다.

[답] ① 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재임용될 수 없다.

● 공무원의 징계

- | | |
|------|--|
| • 전책 |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 • 감봉 |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 • 정직 |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 • 강등 |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 • 해임 |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X |
| • 파면 |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제한 |

☞ 2014 선행정학 p. 447

04. 부패와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는 공식적 행정통제 방법이다.
- ② 공금횡령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 ③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답] ② 공금횡령은 상대가 없는 내부부패로서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거래형 부패는 상대가 있는 대외적 부패로서 뇌물수수 및 특혜교환이 전형적이다.

● 공직부패의 유형

- | | |
|-----------|---------------------------------------|
| • 거래형 부패 | : 뇌물 받고 혜택 부여(외부부패) |
| • 사기형 부패 | : 공금횡령, 회계부정(내부부패) |
| • 일탈형 부패 | : 개인적 부패(돈 받고 단속 눈감아주기) |
| • 제도화된 부패 | : 급행료·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문화(체제적 부패) |
| • 권력형 부패 | : 상층부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부패 |
| • 생계형 부패 | : 하급관료(민원부서)들의 작은 부패 |
| • 백색 부패 | : 처벌을 원치 않는 선의의 부패 |
| • 흑색 부패 | :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 법률에 규정 가능 |
| • 회색 부패 | :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패로 법률보다는 윤리 강령 등에 규정 |

☞ 2014 선행정학 p. 460

05. 우리나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 ③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답]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 ① 기본법률은 다르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지방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소속공무원은 모두 국가직공무원이다.

06.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답] ③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종전의 규정이고 2011년 법이 개정되어 반드시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즉,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부직으로 보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 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호(공무원임용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07.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 ④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답]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주무부처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

정부가 타당성조사 전에 경제적·정책적 측면에서 실시하는 예비조사이다.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주체	주무사업부	중앙예산기관
조사의 초점	기술적 측면	경제적·정책적 측면
조사의 범위	당해사업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특징	사후적·세부적	사전적·개략적
조사기간	장기	단기

08.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예비비 편성
- ② 추가경정예산
- ③ 특별회계 운용
-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답] ③ 특별회계는 단일성이나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고전적 예산원칙의 예외

- 공개성의 원칙 - (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 명료성의 원칙 - (예외) 총괄예산
- 완전성의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 단일성의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의 원칙 - 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 수입, 과년도지출
- 통일성의 원칙 - 특정사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의 원칙

09.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 ②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③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 ④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답] ①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운용 · 특정세입으로	· 특정목적에 위하여 특정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세출에 충당	
성격	소비성	주로 소비성	주로 적립성 또는 회전성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조세 수입과 무상 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 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 제공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 요구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 국 회의 심의·의결	좌동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수립 ⇒ 기재 부장관의 협의· 조정 ⇒ 국회의결
집행절차 (자율성)	합병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좌동	합목적성 차원에 서 상대적으로 자 율성과 탄력성 보 장
수입과 지 출의 연계	연계 배제	연계	연계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금융 성 기금은 30%) 이상 변경 시 국 회 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	국회의 결산심의	국회의 결산심의

☞ 2014 선행정학 p. 491

10.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 과정설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 ②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③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 ④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답] ④ 정의의 제1원리인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란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정의의 원리(J.Rawls)

제1의 원리 (동등한 자유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의 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차등조정 원리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 (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 2014 선행정학 p. 74

11.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과정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 간 경계와 기능 간 경계가 점점 명확해진다.
- ② 조직규모가 줄어들고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진다.
- ③ 중간관리층 규모가 축소되고 행정능도가 낮아진다.

- ④ 분권화를 촉진시키지만 집권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답] ① 정보화 사회가 되면 직무간, 기능간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이음매(경계) 없는 조직(Linden)이 나타난다.

☞ 2014 선행정학 p. 598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ㄴ.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ㄷ.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 ㄹ. 앨리스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답] ② ㄱ, ㄷ만 옳다.

- ☑ ㄴ.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이 아니라 분석이 가능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정된 대안만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 ㄹ. 앨리스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에 해당한다.

☞ 2014 선행정학 p. 206, 215

13. 조직구조 및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높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화가 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공식화는 자원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직위 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 ③ 복잡성은 조직인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정도를 말하며,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④ 집권화는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를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기술서, 내부규칙, 보고체계 등의 명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답] ③ ③만 옳다.

- ☑ ①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수준이 낮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화(계층화)가 높게 이루어진 조직이다.
- ② 공식화가 아니라 집권화
- ④ 집권화가 아니라 공식화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차이

☞ 2014 선행정학 p. 302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예측 가능성 추구	적응성 추구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계층제(수직적 분화) - 공식적·물인간적 대면관계 - 집권화된 고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분화된 채널(수직적 분화 낮음)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분권화된 저층구조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14.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 ②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 ③ 네트워크 기관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④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답] ① 네트워크조직은 상하계층구조로 연결된 긴밀한 조직이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이므로 밀접한 감독이 어렵고 경계가 애매하여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력 있는 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 네트워크조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조직의 간소화(슬림화) - 직접 감독에 필요한 지원인력 불필요 - 환경 변화에의 신속한 대응 - 막대한 초기투자 없이 신제품 출시 - 직무동기부여	- 수탁기관 직접 통제 곤란 - 대리인 문제(조정, 감시비용) 발생 - 제품의 안정적 공급 곤란 -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 X - 네트워크의 폐쇄화

☞ 2014 선행정학 p. 320

15.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 ②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
- ③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④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답] ④ 구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와 달리 제도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지 못하며, 제도의 국가간 차이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의 차이

구분	구제도론	신제도론
개념	공식적인 법령, 정부조직	공유하는 규범, 규칙, 균형점
형성	외생적·일방적으로 결정	제도와 행위자간 상호작용
특성	공식적·구체적·정태적·보편적	비공식적·상징적·동태적
접근	거시주의	거시(제도)와 미시(인간)의 연계
초점	제도의 기술 자체	제도를 통해 인간 행위, 국가정책 등 설명
범위	인간행위, 정책, 사회현상 불포함	인간행위, 정책, 사회현상 포함

☞ 2014 선행정학 p. 132

16.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 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 ㄷ.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 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ㅁ

[답] ④ ㄷ, ㅁ은 틀리다.

- ☑ ㄷ.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은 전형적인 중앙정부업무이다.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가 아니라 전형적인 유료재에 해당한다.

☞ 2014 선행정학 p. 7, 42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 ②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 등을 들 수 있다.
- ③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 ④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보다는 진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답] ③ ③만 옳다.

- ☑ ① 정책분석에 해당한다.
② 양적 기법이 아니라 질적 기법이다.
④ 현실적인 제약으로 진실험보다 준실험이 더 많이 사용된다.

☞ 2014 선행정학 p. 242

18. 바흐라흐와 바라흐(P.Bachrach & M.S.

Baratz)의 무의사결정(non - decision making)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②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 · 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한다.
- ③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
- ④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한다.

[답] ①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폭력 등도 사용된다.

- ☑ ② 편견의 수정,
③ 권력
④ 편견의 동원

☞ 2014 선행정학 p. 168

19.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지관이다.

[답] ② 정부조직의 기본원리를 모르면 혼동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보훈처는 처장이 차관급 정무직이므로 그 아래 차장은 정무직이 될 수 없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가등급)으로 보한다.

- ☑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라고 수업 때 많이 강조한 문제이다.

●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14 선행정학 p. 397

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②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 ④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

[답] ① 우리나라 지방세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공존하고 있으나 현재는 보유세보다 거래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대표적인 거래과세이며 재산세만 전형적인 보유과세이다. 종래에는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로서 보유과세 성격을 띠었으나 2006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국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전반적으로 보유과세보다 거래과세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 ☑ ② 재정력지수가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해당한다.
③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자주도에 해당한다.
④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설명이 반대로 되어있다.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이고,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 주요 지방재정지표

재정 규모 (재정력)	자주재원 + 의존재원+ 지방채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정 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일반회계총세입	자립도가 높다하여 재정이 건전하다 할 수 없다.(재정규모, 세출의 질, 실질적 재정상태, 정부지원규모 내역 알 수 없기 때문)
재정력 지수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다.
재정 자주도	일반재원 / 일반회계총세입	차등보조율 교부기준, 재정자립도 미반영

☞ 2014 선행정학 p. 650